

# 교육정책과 가정과교육

윤 인 경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I. 서 론

우리 나라에서 학교 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가정과 교육의 목표와 성격, 교과 내용과 방법 등도 차츰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제6차, 제7차 교육과정기를 접하면서 이전에 비해 이수 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무엇보다도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국의 중·고등학교 남학생도 가정교과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는 등 큰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양과 질적인 면에서 가정과 교육에 관한 많은 문제가 있으며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표자는 그 동안 가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등의 정책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리고 교육개혁 등 교육과 관련되는 수없이 많은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가정과 교육의 주체는 누구이며, 누가 가정과 교육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가? 그 속에서 가정교육학자,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을 생각해 왔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가정과 교육의 현실은 국가 정책 즉 교육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대한가정학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가정과 교육의 범위를 초, 중·고등학교로 제한하고 국가 정책 중에서도 국가와 공공단체 수준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마련되고 있는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정과 교육과 어떤 관련을 가지면서 결정되고 시행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그 중에는 긍정적인 것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주로 가정과 교육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부정적인 것들과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한다.

## II. 본 론

김종철(1990)은 교육 정책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형성 과정, 집행 과정, 평가 과정으로 구분하

였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생각되어 여기서 는 형성과 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가정과 교육에 대한 현황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

교육 정책의 형성은 교육 정책이 어떠한 경로와 단계를 거쳐 제기되고, 정부의 문제로 귀속되며 심의,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즉,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정과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의 문제일 수 있다. 물론, 정책 결정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느냐? 하는 인적 자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나라 교육 정책의 결정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 해온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대통령령 제15815호, '98. 6. 24)라고 생각된다.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정책을 학교 현장의 개혁과 연결시키고자 138명으로 구성된 학교현장개혁지원단(1998. 11. 27~2000. 7. 23)을 2년간 구성 운영해왔다. 또한 교육부는 85명 정도로 구성된 2년 임기의 교육정책심의회를 정책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의 인적 구성은 대개 대학 총·학장, 교수, 언론인, 연구소 관계자,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중 가정과 교육에 대하여 정확하고 바른 인식을 가진 분이 얼마나 있을까? 있다면 어느 분일까? 발표자의 살펴 본 자료로는 이들 위원 중 가정과와 관련되는 전공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는 1999년 3월 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시안을 만든 사람들은 교육부 관련자(34명)와 제 2 교육 입국 기획단(31명)이다. 이 중에는 외부 전문 위원이 7명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1명의 컴퓨터 교육 전공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육학자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과정 개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 7차 교육 과정 총론을 개정하면서 가정 교과가 없어지고 생활 관리 과목이 생기고, 시간 배당이 대폭 수정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 과정 총론 개정 보고서에 의하면 총론 개정에 관계한 위원은 모두 37명인데, 그 중 교육학(교육 철학, 교육 과정, 교육 심리 등) 전공자가 전체의 37.8%인 14명으로 가정과 교육과 같은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전문가들로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 과정 국제 비교, 현행 교육 과정 분석 등 기초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이었다. 즉, 어느 곳에서도 가정과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과 배려 속에서 관련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 2. 교육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가정과 교육

교육 정책의 집행은 수립된 교육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천·시행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

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 정책의 집행 여부와 관련하여 그 근거는 교육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서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교육 예산에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보고, 교육 행정분야, 교수·학습 자료 개발분야, 연구비 지원 등 몇 가지 분야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 예산

수립된 교육 정책의 시행은 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따라 그 실천 여부가 달라진다.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각종 정책이 모두의 노력에 의해 면밀하게 수립되었다고 예산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집행 의도가 미흡해 지면 정책의 실제적인 시행 비중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2000년 교육부 예산의 개요를 중심으로 최근 교육예산 집행의 경향을 살펴보자. 대부분 예산 집행 계획의 수립은 해당 연도의 교육부 추진 중점 사업에 의해 편성의 방향이 결정된다. 2000년 교육재정의 세출 예산은 중앙교육재정 대 지방교육재정이 16.3% 대 83.7%로 지방교육재정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것은 교육지방자치제의 강화와 초·중등 교육의 지방 분권화 정책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항목의 집행 내역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부가 2000년에 중앙교육재정으로 집행하는 초·중등 교육의 중점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육의 혁신' 분야와 '산학연계 직업교육의 강화' 분야를 들 수 있다.

2000년도 '초·중등교육의 혁신' 분야는 교실수업의 혁신, 교육 과정 개정, 유아·특수교육 진흥, 학생 중식 지원, 교원 자질 향상 연수·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산학연계 직업교육강화' 분야는 고교 직업교육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중등 교육의 혁신' 분야의 정책 중 교과교육 연구활동, 학교수업 혁신 열린교육, 영재교육, 과학교육활동 지원이 추가 되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한 예산은 '99년에 비해 1/4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제7차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현장 적용 여건 조성, 1종 교과용 도서 편찬, 교육평가 연구학교 운영,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용 도서 발행, 학교종합평가 등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개정 및 교과서 개발 정책 재정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99년에 비해 거의 2배의 예산(305억→580억)을 확보한 유아,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비교하면 매우 위축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교원자질향상 연수·복지 정책 관련 재정은 '99년에 비해 50% 이상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이 영어 교육 및 외국어 교육 부분 및 사립학교 교원연금 관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학교급간, 교과간 교사들의 복지 증진에 어려움이 있다.

교육부 평생교육국에서 지원하는 '산학연계 직업교육체제 기반 구축' 분야의 예산은 '99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업계 고교보다는 전문대학에 편중된 지원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고교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은 '99년도에 비해 50억원 이상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교 직업교육의 내실화 추진에 애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에 지원하는 이

분야 재정은 주로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 및 내실화,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및 농어촌지역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등에 집행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의 특성화·내실화 정책 중 수요자 중심 교육 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여학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상업계 고교 가사계열 지원('98년 18.4억, '99년 23.4억, 2001년 19억 예정)' 부분은 가정과 교육 분야에서는 모처럼 눈에 띄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업계 고교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가사계 과정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은 물론 다양한 직업교육의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정책은 상업계 고교들 중 정규 가사계 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학교들을 포함하여 시설·설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사계 직업교육의 활성화에 활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00학년도 사업 예산의 경우 실업계 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137억 : 특성화고교 교육기자재 확충 지원, 공업계 학과의 첨단학과 개편 지원, 가사계열 학과 확충 지원, 실험·실습 기자재 대체 지원)에 포함하여 총액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의 집행 시에 우선 지원의 배분 순서에서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70억 원씩 교부를 하고 있으나 주로 교실 중심의 노후 시설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뿐 제7차 교육 과정 대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요구되는 남자 고교의 가정 교과 관련 실습 시설·설비 지원에 대한 항목은 최근 3년간의 교육부 주요 재정 지원 사업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초·중등학교의 시설·설비 확충 부분은 교육지자체의 실시로 인해 지방교육재정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각 시·도마다 가정 교과 담당 장학진이 이에 대한 중요성을 숙지하고 매년 재정 지원 결정 시 중점 추진해야 하나 이러한 행정 전문가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 2) 교육 행정

각 시·도 교육청의 학교 교육을 관장하고 가정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 가정 교과 담당 장학사가 한 분도 없는 지역이 여러 곳이 있다. 또, 시·도 교육청 전체에 가정과 전공자는 얼마나 될까? 과학 등 타 교과와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가정 교과 전담 장학사가 확보된 경우에도 직제 상 그들의 소속 분야가 중등 교육과, 과학 기술과, 교직과 등으로 다양하다. 가정 교과 담당 장학사가 없는 시·도의 경우 타 교과를 담당하는 여자 장학사가 가정을 담당하고 있다면,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정책이 그들에 의해 과연 바르게 입안 될 수 있겠는가?

이는 교육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가정과를 전공한 장학관도 한 두분 있었으나 수년 전부터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교육 과정 정책 관련 분야에 교육 전문직 한 분이 있을 뿐이다. 최근

몇 년간 이루어진 교육부 교육 전문직 공채에서 가정과 전문직 모집은 아직 없었으며, 얼마 전 공고된 2000년도 교육 전문직 공개 채용에서도 가정과는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 행정 전문 인력의 미흡한 확보는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교과 교육 관련의 다양한 정책 입안에 실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즉 교육부나 시·도 교육청에서 수행되는 가정과 교육 관련 정책들은 초·중등학교 교양교과로서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평가 방법의 개선, 실업계 고교 교육 중 가사계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가정과 교육과 관련되는 각종 연구 시범학교 선정 사업, 정보화 교육과 가정과 교육에서의 교육 정보화 기반 구축,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및 양성평등교육, 특기적성교육의 내실화, 가정과 교원의 자격과 전문성 강화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짚어본 바와 같이 소수의 가정과 교육 전문직들은 직제의 한 분야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개인의 다각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모든 일에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회나 대학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이들로부터의 전문적인 자문 및 체계적인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요구된다.

### 3) 교수 학습

최근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교수 매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1990년 이후 매년 80~90편을 제작하고 있다. 1996년에는 총 90편을 개발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용으로는 48편이 제작되었는데, 그 중 수학 9편, 과학 11편, 기술·산업 8편인 것에 비해 가정과는 단 1편도 제작되지 않았다. 또한, 1992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에서의 교과별 입상현황을 보면, 1997년~1999년(제 6회~제 8회)까지의 입상작 총 1,337편 중 가정과 관련 입상작은 30편(2.3%)에 불과하다.

가정과 교수·학습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실험·실습 시설 및 기자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 남자 중학생들에게 가정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개정하였으나 이들 시설·설비의 확보는 여러 부분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의 변화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남자 중학교뿐만 아니라 남자 고등학교에서의 가정 교과 운영을 위한 시설·설비 확보에 관심과 노력을 정책 수행과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 4) 연구 지원과 인력

이와 같은 부진 현상은 연구 지원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교육부가 교과 교육 진흥을 목

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 공동연구소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연구 과제를 분석한 결과 1998년 55편, 1999년 53편, 2000년 54편 총 162편이 지원되었다. 그 중 순수하게 가정교과와 관련된 연구 과제는 1998년 2편(3.6%), 1999년 1편(1.9%), 2000년 1편(2.0%)으로 총 4편이 지원되어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국어과 1998년 4편(7.3%), 1999년 6편(11.3%), 2000년 5편(9.3%)과 과학과 1998년 6편(10.9%), 1999년 10편(18.7%), 2000년 6편(11.1%)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 또는 지역간 교사들의 학습 조직화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율연수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도 1999년에 선정된 총 1,000개팀 중 초등 실과 3팀, 중등 가정과 8팀으로 전체의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과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교육 관련 연구소들의 전문 인력 확보도 매우 열악하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는 가정과 전공자가 전혀 없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는 각각 1명씩 있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어교육 전공 5명, 과학 교육 전공 7명, 영어교육 전공 5명, 그리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체 연구원 중 농업교육 전공자의 비율이 14% 정도인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력 분포이다.

이외에도 한국교육연감 등 각종 통계자료에 가정과와 관련되는 내용이 아예 없거나 잘못 되어 있는 경우, 다른 교과들과 통합 제시되는 등 가정과 교육과 관련된 바른 통계를 이해하기에는 부실한 점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외에도 각종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가정과가 제외되고 있는 경우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III.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주요 교육 정책은 의사 결정 과정에 교육학 관련자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교육 전공자는 적으며, 교과별 전공자의 배려도 고르지 못하다. 즉, 가정 교과 관련자가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결과 가정과와 관련되는 중요 정책이 마련되거나 가정 교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향의 정책이 수립되고 있지 못하다. 그 결과 우리는 뒤늦게 정책의 잘못된 결정을 알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우리는 수 차례의 이런 경험을 갖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가정 교사자격과 연수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또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 과정에서도 가정 교과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중등 교육에서 다루는 하나의 교과로서의 몫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교육의 여러 부문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못하고 타교과에 우리의 고유 영역을 빼앗기는 등 그 결과 전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 현장에서 인성 교육, 소비 교육, 성교육, 영양 교육의 주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 영역이 우리의 고유 영역이라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가?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교육 관련 각종 위원회에 가정 교육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위원회에 소속되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회가 기간 동안의 운영을 종료하고, 최근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행 등과 맞물려 가칭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등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 가정관련 전공자 또는 가정과 교육 전문가 등이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가정과 교육 담당 교육 행정 전문직을 중심으로 속해 있는 행정 조직에서 가정과 교육과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정책 분야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 전문성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최근 기술·가정 통합에 따른 자격 표시에 관한 논란에 대해 아직도 실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장학사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예산의 배분이나 집행 과정에서 가정과 교육에 해당하는 몫이 얼마인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 담당 교육 행정 전문직들이 행·재정적인 정책 결정에서 요구되는 여론과 합의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활용하여야 한다. 또 예산 확보와 관련한 예를 들면 직업 교육 강조에는 반드시 가사계가 포함되어 예산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1년 예산안 중 가사실업계열 학과 확충비 19억인데 비해, 여자영농농업고등학교의 농업 교육원 지원이 11억 원은 적정한 것인가? 실업계 고교 내실화 315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도 가정과 교사는 가정과의 실험, 실습비가 과학과에 비하여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하며, 다소 힘이 들더라도 배당된 실험·실습비를 적절하고 완전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가정 교육과 관련되는 정책 입안, 정책 연구, 정책 수행 등에 참여 가능한 충분한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한 관련 연구 기관이나 시·도 교육청 등에 가정 교육 전공자가 증원되어 현재의 양적 측면에서의 교과간 불균형이 시정되어야 하며, 그 밖의 연구

기관에도 최소한 1명이라도 가정과 전공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학교 현장까지 연결되어 가시화 될 때 제7차 교육 과정에 제시된 국민공통기본교과로서의 위치를 찾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가정 교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교육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육학자, 교육부의 예산 편성 담당자, 교육연감 등 통계 자료 담당자들이 가정과 교육에 대한 바른 인식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회 차원에서 이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다.
- 가정과 교육 관련자들에게 가정과와 관련되는 논문, 연구 과제, 공모전 등의 지원이나 평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정 분야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가정 교육 관련 모든 사람들이 홍보 요원이 되어 각계 각층(전국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교육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회 차원에서 '가정 교육 홍보의 해' 설정과 같이 다양하면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 활동을 하는 등 학회 활동의 대외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1996).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_\_\_\_\_(1996).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  
 교육부(1999). '99 상반기 심사평가위원회 심의자료.  
 \_\_\_\_\_(1999).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_\_\_\_\_(2000). 1999년도 하반기 교육부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보고.  
 \_\_\_\_\_(2000). 2000년도 심사평가 대상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주요정책과제 평가계획(정부업무 심사평가 관련).  
 \_\_\_\_\_(2000). 2000 상반기 정부 업무 심사평가결과 보고 및 자체 심사평가 결과 협의 자료.  
 \_\_\_\_\_(2000). 2001년도 교육예산안 보도자료.  
 \_\_\_\_\_(2000). 2000학년도 교원연수 운영 방향.  
 \_\_\_\_\_(2000). 2000년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개요.  
 교육학 대사전 편찬 위원회(1997). 교육학 대사전. 서울: 교육과학사.  
 교과교육 공동연구소(1999). 교과교육연구: 1998~1999-연구 보고서 요약집.



김종철(1990). 한국교육정책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새교육공동체위원회(1999). 학교현장개혁지원단 우수실천 사례집.  
윤인경(1997). 교육 정책과 가정과 교육.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 7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연구 보고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00 발간 예정). 교육정보 백서.  
한국교육행정학회(1996). 교육정책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http://www.moe.go.kr>  
<http://www.newedu.go.kr>